민주당 공직후보 추천, 중앙당 입김 배제 방점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경선방식 국민참여 경선, 일반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경선
향후 지방선거 공천 역시 공천관리위 역할은 관리에 초점 예고
중앙 정치권 개입 소지 사실상 차단, 개방형이 핵심

서울=강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 추천 과정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개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진 계파 공천, 중앙당 입김 배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셈인데 지역 정치권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27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당에서 행해져왔던 비공개 방식을 벗어나, 시민과 국민이 직접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부터(사전방송은 6시 30분) 약 1시간40분동안 민주당 공식 방송국 델리민주TV를 통해 면접 내용을 전면 생중계할 방침이다.

후보자별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등 자기소개, 선거구별 공통 질문, 사전접수된 국민 질문, 실시간 채팅 현장 질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보자들을 정밀 검증한다는 것이다.

국민질문 사전접수는 오는 30일까지 4일간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별도 인증절차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욕설, 비방, 민원 요청, 특정후보 지지 등 면접과 관계없는 질문을 제외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해 후보자가 블라인드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경선에 앞서 결정된 민주당 공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개방형 공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말 그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적인 심사 범위는 배제한 채 공직후보자 추천을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한 셈이다.

보궐선거 예비 후보등록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국민면접이 오는 1일 치러진다. 이어 내달 8일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2월 25일~28일까지 투표해서 최종 후보를 도출한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도내 정치권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방향 및 공천룰을 결정하는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또한 특정후보를 밀실 공관위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당헌 당규에 명시된 공천 배제 대상의 생환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된다.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되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은 공관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과거 일부 조정될 수 있었고 계파 영향력에 따른 특정 후보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비일비재 했지만 향후 경선에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면접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가 가진 역량과 비전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등 국회의원의 개입 여지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사전정보공표 등록률-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수요 관리 등서 높이 평가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282개 공기업 등 58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정보,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시는 81.2점을 획득, 전 기관 평균인 80.3점과 대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률과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수요 관리 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완주 동행 의원, 박성일 군수와 머리 맞대

27일 완주군청 방문, 주요 군정 현황 보고 현안 협조 약속
건강보험공단 완주 출장소 신설 방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논의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27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현안을 보고 받고 야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완주군 호남동행 국회의원에 위촉된 그는 이날 박성일 군수와 만나 시급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의 이날 완주군청 방문은 단순한 현안 지원을 넘어 동서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당내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가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위촉한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직접 찾는 등 열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완주 방문은 각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군수는 "도내 시군 가운데 완주군만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가 없어 군민들이 의료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출장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라인 재배치, 사무공간, 휴게실 설치 등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 수소상용차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종성 의원은 "호남동행을 계기로 정당과 상관없이 국민 전체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건보공단 지사 신설, 직업재활시설 리모델링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세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김성주 의원, "탄소산업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전주 선정 적극 환영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 특화단지로 지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이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비상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전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소식을 전하면서 "전북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탄소산업은 향후 전북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 경제적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선정에 앞서 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 의원은 초선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법률을 제정해 낸 바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 310억 원 확보에 힘을 보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강영희 기자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신청 063) 230-5712